

Issue No.
2020-3 March
2020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유엔인권이사회 소식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 인도 시민권법 개정안 위헌심사 참여 청원서 제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는 인도 시민권법 개정안 (Citizenship Amendment Act, CAA)에 대한 인도 대법원의 위헌심사에 제3자로 참여하겠다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본 시민권법 개정안은 무슬림 차별적인 요소가 담겼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제출한 청원서는 “모든 이들의 인권을 보호, 증진하고 필요한 옹호활동을 실시하는 유엔인권 최고대표의 임무에 따라 본 소송에 제3자로서 참여하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2019년 12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인도에 관한 언론브리핑에서 인도의 시민권법 개정안이 “본질적으로 차별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인도의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이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에 명시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권법 개정안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등 인도 인접국가 출신의 박해를 받는 소수집단이 인도 시민권을 더욱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무슬림은 제외하고 있다. 그로 인해 인도에서 수 주간 시위와 종교간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시민권법 개정안과 더불어 반무슬림이라는 비판을 받는 정부의 시민명부 (National Register of Citizens, NRC) 도입계획으로 시위가 격화되고 전국적으로 6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인도정부는 유엔인권최고대표의 개입시도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시민권 개정안은 “내부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인도의 외무부는 “외국의 어떤 당사자도 인도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에 제소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강력한 입장이다. 시민권법 개정안은 합헌이며, 우리의 헌법적 가치에 완전히 부합한다.”라고 밝혔다.

미셸 바첼레트 (Michelle Bachelet)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최근 델리에서 일어난 종파간 분쟁과 관련해 “무슬림에 대한 다른 종교집단의 공격에 대해 경찰이 방관하고 평화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한다는 소식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나렌드라 모디 (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이끄는 힌두 민족당은 시민권법 개정안을 강력 추진했으며 법안폐지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해왔다. 인도 대법원은 시민권법 개정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150개의 청원을 심사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1월 해당법의 시행을 중단하는 대신에 인도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4주의 기간을 주었다. 인도 정부는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이다.

<https://www.cbsnews.com/news/u-n-rights-chief-seeks-to-intervene-against-india-citizenship-law-that-excludes-muslims/>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5425&LangID=E>

유니세프, 유엔인구기금과 함께 조혼 근절을 위한 글로벌 프로그램 연장 결정

유니세프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UNICEF)와 유엔인구기금 (UN Fund for Population Activities, UNFPA)는 조혼을 근절하고 세계 수백만 소녀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었던 다국가 프로그램을 4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혼 근절을 위한 유엔인구기금-유니세프 글로벌 프로그램 (UNFPA-UNICEF Global Programme to End Child Marriage)은 2023년에 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 12개 국가의 1천4백만 명이 넘는 소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프로그램은 2016년 처음 실시되었는데, 가족, 교육가, 보건서비스 종사자, 정부, 종교인, 지도자들이 2030년까지 조혼을 근절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다.

헨리에타 포레 (Henrietta Fore) 유니세프 총재는 “프로그램이 실시된 이후 수백만 명의 소녀들이 원치 않는 결혼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포레 총재는 “그럼에도 1천2백만 명의 소녀들이 매년 결혼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의 미래, 건강, 행복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프로그램을 4년 연장하면서 지금까지의 성과에 더해 이와 같은 약속을 완전히 철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로그램의 2단계는 소녀들의 교육 및 보건 서비스 이용 확대, 능력 개발, 조혼의 위험에 관한 부모·지역사회 대상 교육, 양성평등적 사고방식 장려,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18세를 최저 혼인연령으로 규정하는 법안 시행과 같이 효과가 입증된 전략에 집중할 것이다. 또한 10대 소녀들과 관련된 정책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데이터와 증거의 중요성에 주목할 것이다.

2016년 글로벌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한 소녀들의 수는 7백 7십만 명,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수는 4백 2십만 명이 넘었다. 본 프로그램은 정부가 조혼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개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6억 5천만 명의 소녀와 여성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결혼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은 글로벌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남아시아가 조혼 축소노력을 주도해왔으나, 이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조혼 근절 노력에 앞장서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이 지역의 인구성장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개선이 있어야 한다. 결혼한 소녀들의 출신지역을 살펴보면 가장 최근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3분의 1에 달했는데, 10년 전에는 그 수치가 5분의 1이었다. 중남미와 카리브해 국가들의 조혼율은 지난 10년간 정체상태이다.

소녀가 강제로 결혼하는 것은 즉각적이면서 일생에 걸쳐 지속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교육을 마칠 가능성이 감소하는 한편, 가정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은 증가한다. 청소년기에 임신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임신이나 출산 중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20대 여성들보다 높아진다. 여러 세대에 걸쳐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도 크다.

조혼 관행을 2030년까지 근절한다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욱 빠르게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10년 후에는 1억2천명이 넘는 소녀들이 18세 이전에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https://www.unicef.org/press-releases/unicef-and-unfpa-renew-multi-country-initiative-protect-millions-girls-child>

국제 NGO 소식

인권을 고려한 코로나 19 대응: 정부에 대한 권고

휴먼라이츠워치는 3월19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정부가 모두의 건강권과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존중 관점에서의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이 보고서는 정부의 의무,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생으로 인한 인권문제, 지금까지의 대응사례 등을 분석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건강권, 표현의 자유, 차별금지, 이동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에 권고를 제시한다.

정부는 이동 및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한하지 않아야 하고,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려해야 하며, 과학적인 근거가 존재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을 때에만 강제적 제약을 시행할 수 있다. 격리나 봉쇄 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정부는 식량, 식수, 보건서비스,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도소, 이주민 수용소, 노인,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특별한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고위험군 보호나 질병 전파 방지에 어려움을 겪는 등 공공보건제도와 사회복지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위험과 감염방지법에 대해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전달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주민, 망명신청자, 난민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필수적인 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구호활동의 중점적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특히 큰 피해를 입는 여성과 소녀들을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학교의 임시 휴교 상황에서도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이행하도록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시행한다.

케네스 로스 (Kenneth Ross) 휴먼라이츠워치 사무총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대중에게 양심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감염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만 이동을 제한하며,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국경을 넘어서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 자신의 건강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은 세계가 연결되어 있고 공동의 책임을 갖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

<https://www.hrw.org/news/2020/03/19/respect-rights-covid-19-response>

인권 캠페인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유엔 #FightRacism 캠페인

3월 21일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이다.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샤프빌(Sharpeville)에서 아파르트헤이트 통행법 (백인이나 유색 인종의 거주구역에 흑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법)에 반대하는 평화적 시위자들에게 경찰이 발포하여 69명이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다. 1966년 유엔 총회는 이 날을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로 선언하면서 국제사회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철폐하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외국인혐오, 인종차별, 불관용이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세계적으로 관용, 평등, 차별금지 문화를 지향하기 위해서 #FightRacism 캠페인을 시작했다.

2020년 3월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FightRacism 캠페인은 차별에 맞서 싸우는 세계 스포츠계 인사들에 주목하고 유로리그 농구팀과 협력하여 통합의 메시지를 전파할 것이다.

나아가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은 2015년 시작된 아프리카 혈통 인구의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10년 계획(International Decade for the People of African Descent)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하고 소외된 집단 가운데 하나인 아프리카 혈통 인구의 인권보호를 위해 각국이 이룬 성과를 평가하고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향후 시행할 정책을 파악하는 것이다. 국제기구와 국내 기구의 연구와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아프리카 혈통 인구는 교육, 보건서비스, 주거, 사회보장 등의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 올해 이 계획의 중간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International-Day-for-the-Elimination-of-Racial-Discrimination.aspx>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제안 및 코멘트는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김효정 hjkim5@nhrc.go.kr